

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질의

삼성 새만금 투자포기 대응방안 밝혀라

최은희, “장애인 조례 형식적”
 송지용 “서울 장학숙 이전을”
 양용호 “농촌마을사업 점검을”
 양용모 “삼성 투자 대안 마련”
 국주영은 “여성정책 방향 제시”

전북도의회는 9일 제333회 정례회를 열고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를 펼쳤다.

이날 질의는 최은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지용(더불어민주당, 완주), 양용호(국민의당, 군산2), 양용모(더불어민주당, 진주8),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전주9) 의원이 나섰다.

○최은희 의원

▲장애인 관련 조례 저조한 이행실태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증진 ▲탄소법 제정 시작 ▲화재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최은희 의원

특히 최 의원은 장애인 관련 조례 이행 실태를 놓고 도정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 장애인 관련 각종 조례 총 65개 조항 중 3개를 제외한 모든 조항 이행 답변을 받았지만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한뒤 “조례가 규정한 각종 계획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다. 예컨대 계획에 포함

된 문제점과 애로사항, 향후 대책이 매년 동일하거나 수치를 제외한 모든 문구와 표현이 그대로 반복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례에서 계획 수립시 포함시키도록 정해놓은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지용 의원

▲전북도가 운영하는 서울 장학숙에 대한 운영 ▲착한가게 운영 시책 ▲완주소방서 계획대로 신설 등을 집중 질타했다. 송 의원은 “광주전남 남도학숙과 비교해 볼 때 5명 남짓한 숙소에 2명이 생활하는 서울 장학숙 공간은 그야말로 비좁고 침침한 공간이다. 또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는 상태로 증개축도 불가능하다. 지역 우수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지용 의원

○양용호 의원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진단 ▲공무원 장기교육인원 선발형평성 ▲섬지역 해양쓰레기 등을 질의했다.



양용호 의원

양 의원은 “420억원이라는 대규모 농촌마을 사업이 시작부터 불안하더니 급기야 사업추진 1년도 안

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마을까지 생겼다”면서 “사람잡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본래도에 오르기 위해서 전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용모 의원

▲전북교육청 2년 동안 평가 ▲학교시설공사 관리 감독 부실대책 ▲초등 답답인 교사제도 교육현안 개선 ▲새만금 MOU 관련 발전방향과 계획을 따져 물었다.



양용모 의원

양 의원은 먼저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북교육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32.1%나 된다.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양 의원은 이어 “삼성 MOU 투자체결이후 송지용 의원의 노력과 파기 이후 도 차원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계획을 밝혀달라”며 송 지사를 공지에 물었다.

○국주영은 의원

▲전북여성정책연구소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통합 ▲인권침해 예방 대응 ▲학교 비정규직 및 교육 공무원 고용불안 등을 질의했다.



국주영은 의원

국주영은 의원은 “도내 74개 이르는 여성 관련단체와 전북도 산하기관이 연계해 전북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헤드쿼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송지용 지사는 “장애인 관련 차지법규는 12개가 있으며 총 65개로 5개는 미 이행 상태이다”면서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장애인평생교육실태조사, 장애인인권보장 배너 개설 3개 항목은 올해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비 지원 2개 항목은 시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특히 조례 이행 부분은 사후평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장학숙 이전에 대해 “수도권 진학을, 서울장학숙 입사경쟁률 추이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도민 의견 조사, 사업방식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연구를 진행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농촌거점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협의·소통하며 차근차근 추진해 성과를 높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7월 삼성 MOU체결을 주관하던 삼성 조직인 ‘신수중사업단’이 해체된 이후 대화 채널이 단절됐다. 그러나 미래전략실 기획팀을 실무창구로 활용해 투자 이행을 위한 계획 마련과 바이오 산업 등 대체 투자를 건의했고 삼성그룹의 회신 결과를 보고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밝혀겠다”고 답했다.

여성정책 헤드쿼터에 대한 질의에는 “통합에 따른 장·단점과 타 시도 사례 등을 분석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김성주, 더민주 중앙당 호남특보 임명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중앙당 호남특보로 임명됐다. 김성주 특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호남 사이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책임자로 보직을 받았다.



김성주 특보는 향후 원내와 당에서 예산과 지역의 주요현안을 논의하며 호남민심을 대변하게 된다.

김 특보는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지역 이익 다룸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단순히 호남이란 이름을 갖고 정치적으로 재해석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속 호남, 호남의 시각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국회와 더민주와 지역을 이어가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주 특보는 현역의원 시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탄소산업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

‘리베이트’ 수수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국민의당 김수민(30·여·비례대표 7번) 의원과 박선숙(56·여·비례대표 5번)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9일 “김 의원 고발 건이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배당됐다”며 “오전에 김 의원에게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있는 홍보물 제작업체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 등 2개 업체로부터 일감 붙여주기의 댓가로 총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 의원을 8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과 왕주현 선거사무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박 의원, 김 의원, 왕 사무장이 사전 보고와 지시를 통해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쟁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A사는 리베이트 2억원을 요구한 왕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역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1억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도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허위계약을 만들었다.

아울러 선관위에 따르면 TV광고 대행업체인 B사도 김 의원이 리베이트 1억원을 요구하자 그가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계약을 작성해 6820만원을 제공했다.

B사는 업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 팀원에게도 6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억2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6년 생으로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 의원은 비례대표 배정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그는 숙명여대 사가디자인학과 졸업 후 동문들과 만든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의 공동 대표이사를 지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 김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 깜짝 영입했다.

당시 안 대표는 김 의원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당 선거 홍보 전략을 담당하며 로고송 등을 제작한 김 의원은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신한국당 소속으로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배(88·현 새누리당 총북도당 부위원장)씨의 딸이다.

박 의원은 2002년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사상 최초의 여성 대변인을 지냈다.

선거전략 전문가로 통하는 박 의원은 금융실질(前) 법무부 장관이 2006년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을 때와 정동영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후보였던 당시 각각 선거대책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안 대표와는 2012년 대선캠프에 합류하며 인연을 맺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고발을 했더라도 우리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며 “향후 김 의원 등의 소환 계획, 압수수색 장소, 추가 압수수색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심상정 “구조조정 더민주당 앞장서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9일 조선업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책임 회피, 폄수·부실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은 구조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부실·폼수 대책을 20대 국회가 철저히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며 “20대 국회 내에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1당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야당의 책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3당 원내대표 원구성 평가 제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놓고 3당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다. 각 당 원내대표는 서로가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들 3명을 비교하는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득과 실이 비슷하다는 평이다. 긍정적인 부분은 1당 원내대표로서 무난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국회의장을 사수했다는 점이다. 명분 면에서는 분명 1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또 우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는 86운동권 출신으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여야 협상을 큰 충돌 없이 조기에 대화로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다만 상임위 배분에서는 양보가 컸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 예결위를 가져오긴 했지만 경제 핵심 상임위원 기획재정부와 정부위, 미방위를 새누리당에 내줬다는 점에서 ‘알짜’ 상임위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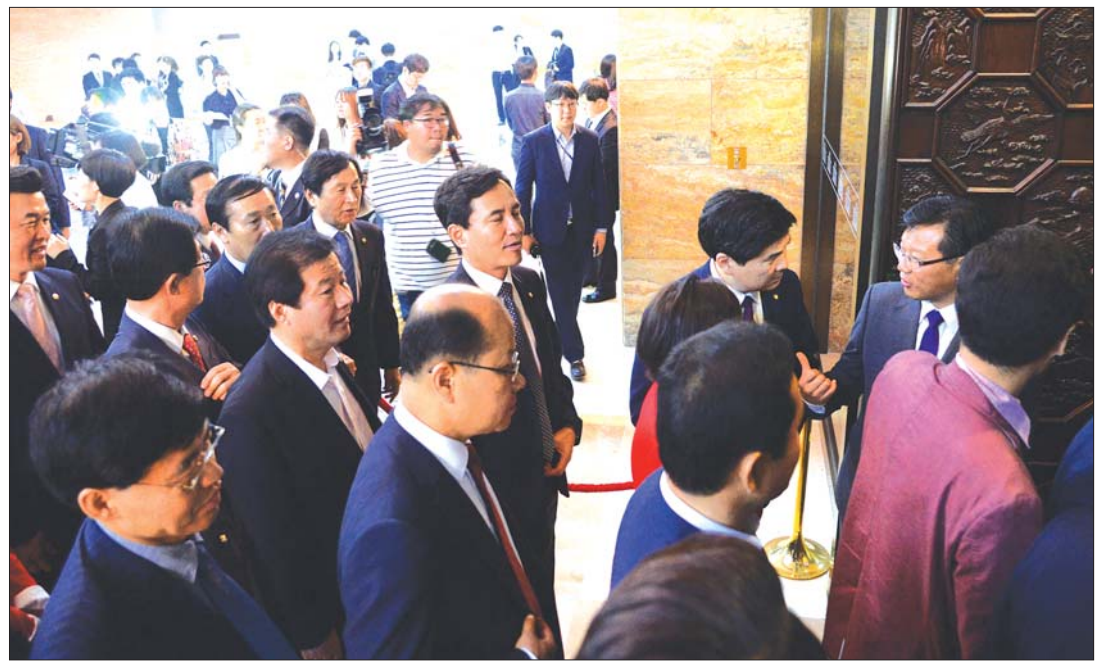
우 원내대표 역시 이를 의식한 듯 8일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직후 기자회견담화를 열어 “우리 당 의원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게 아니라 서운해할 것 같다”며 “정상적인 원 구성이 더 중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장을 내주면서 알짜 상임위를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금융을 담당하는 정부위와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재위를 사수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도 확보했다. 미방위는 향후 대선과정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한 상임위원 평가다.

또 국회의장을 야당에 내주는 과정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는 원칙을 확실히함으로써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복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의장을 되찾아올 근거도 일정 부분 마련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무난하게 협상을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는다. 7일 국민의당이 주장한 ‘각당의 선(先)국회의장 선출 후 자유투표’를 더민주가 수용하면서 협상이 빨라진 동력을 제공한 것이 소독이다. 3당으로서 중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남 민심에 도움이 될 산지위와 핵심 상임위원 교문위를 확보한 것도 국민의당으로서 긍정적인 점이다. 다만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여야 두 당의 싸움에 지역 제3당으로서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다. /이성주 기자



20대 국회 첫 본회의의 입장 20대 국회 첫 본회의가 개원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이 줄서 입장하고 있다.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 도내 정치권 반발 확산

도의회 “구 재단과 교육부 유착관계 의심”·국민의당 도당 “교육부 정치적 의도 사죄해야”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와 관련, 도내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구 재단의 자구계획안을 발표할 교육부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자산을 처분해 정상화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구 재단의 비윤리적이고 비 정상적인 계획서를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구 재단과 교육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남대 의과 대학 폐과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교 자산을 개인 썬치터처럼 사용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구 재단에 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서남대 운영을 다시 맡기는 것은 남민 시민과 서남대 학생, 교직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또 다른 범죄 발생을 방조한 것이다”라며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남대 구조개혁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전북도민 모두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모든 구성원의 진심과 희망을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간에 타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서남대 의과대학을 폐과하려 한다는 정치적 계략이나 음모설이 사실이라면 전북도의회와 도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9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서남대 관련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도민에게 사죄하고 의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를 폐지하고 한려대를 폐교하겠다는 서남대 구 재단의 자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남대 구 재단은 횡령과 비리 등 대학 경영 부실 책임의 장본인이므로 대학 정상화 논의에서도 빠져야 하는

주체인데도 교육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서남대 임시 이사회가 새로운 인수를 찾아 현실성 있는 학교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왜 교육부가 구 재단의 안만을 놓고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행위를 했는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도당은 “교육부는 서남대 구 재단의 자구안을 발표해 지역민의 갈등과 분열에 앞장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정리하지 못하고 대안 제시마저 못하면 교육부가 먼저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잠몰된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혁신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의도가 공평하지 않고 원칙적이지 못하면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